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발전방향*

김 호** · 양성범***

Developing Strategies of the Large-scale Districts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Kim, Ho · Yang, Sung-B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perness,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n th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LEAD). For this, we survey 11 public officers who manage the LEAD. Most of them aware necessities of LEAD project. They have a higher satisfaction and think that the project affect ripple effect and contribution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Main performance expected of the LEAD project is a spread of natural circulation agriculture in connection with cultivation and stockbreeding. For continuan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fter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find markets of products. Also policy making related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technique is requi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EAD project need a modification based on field and change of agricultural issues.

Key words :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sustainab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ublic officer's awareness*

I. 서 론

최근 FTA 확대 및 TPP 등의 수입개방 등 대외적 농업환경 변화와 아울러 농어업·농어

* 본 연구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농림축산식품부, 2014. 12)’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임.

**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조교수(passion@dankook.ac.kr)

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¹⁾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Kim and Park, 2014), 현재와 미래에 농업·농촌이 갖는 중요한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민의 경우 농축산물 구입 시 채소, 육류 등은 ‘안전성’을, 과일은 ‘품질’과 ‘맛’을 곡류는 ‘원산지’ 등을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사고, 백수오 사건 등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농식품 안전 및 안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Jeong et al., 2010; Choi et al., 2014). 2013년 말 현재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약 3조 1,373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약 7조 4,749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²⁾ 그러나 2010년 이후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폐지, 201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사고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연평균 약 18.9% 감소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연구로 Jeong 등(2010)은 충남 아산과 경남 산청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경영체의 경영성과를 진단하고 유기농업 경영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Heo(2013)는 2006년 경북 울진, 전남 순천, 전북 완주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참여농가들의 인식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Heo와 Kim(2013)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인증면적 및 인증농가 수,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경영실태, 친환경농업 지표, 친환경농가의 인식실태 등에 대해 선정 당시와 완료 시점의 변화실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확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Yang과 Kim(2015)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선정된 14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인식, 만족도, 활용도를 조사하고, 사업전후의 친환경농업 면적과 소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변화실태 또는 생산자의 인식 및 만족도에 국한되어 있다. 친환경생산기반 구축사업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사업단 또는

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농림축산식품부, 2014)

2)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55호, 2013)

시·군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사업단 및 시·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필요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한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와 달리 최근 사업수요 감소와 성과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³⁾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화된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의 지구와 단지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친환경농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⁴⁾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단 및 시·군 담당자 등 친환경농업 현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생산기반 구축을 방향성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2014년 8월말까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 3곳을 제외한 11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업의 적절성에서는 조성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적정 규모, 사업 선정 방식을 조사하였으며, 둘째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서는 사업 만족도, 주요 세부 사업의 중요도, 사업과급효과 및 기여도, 기대성과를 조사하였다.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는 사업성공요인,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하기 위한 요인 및 확산을 위한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심층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성사업의 적절성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필

3) 2011년 34개소, 2012년 42개소, 2013년 44개소로 사업 신청지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4) 농업 환경보전역활 강화 및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5. 8.)

요하다’(81.8%), ‘매우 필요하다’(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과 Kim(2015), Heo (2013)의 단지 내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조성사업 필요성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체인 생산자와 사업단 또는 시군 담당자 모두가 해당 조성사업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 Necessity on the project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Necessity	N	%
Strongly agree	2	18.2
Agree	9	81.8
Normal	0	0.0
Disagree	0	0.0
Strongly disagree	0	0.0
Total	11	100.0

2014년 말 현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면적은 200 h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규모대로 하되 품목별로 소규모 권역 설정이 가능토록 조정해야 함’이라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재 규모보다 작더라도 지역특성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27.3%),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사업권역을 면적기준이 아닌 행정구역기준(읍·면 단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Table 2. Area properness on the project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Area properness	N	%
Unchanged with products setting	5	45.5
With local characteristics	3	27.3
Unchanged	2	18.2
Others	1	0.0
Total	11	100.0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선정 방식에 대해 ‘적절하다’(90.9%), ‘적절하지 않다’(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는 친환경농산물 판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

업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것보다 기존 단지를 보완·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Table 3. Selection properness on the project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N	%
Proper	10	90.9
Not proper	1	9.1
Total	11	100.0

2. 조성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구체적으로는 ‘만족한다’(63.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이다’(27.3%), ‘불만족한다’(9.1%)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Satisfaction on the project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N	%
Very satisfactory	0	0.0
Satisfactory	7	63.6
Normal	3	27.3
Unsatisfactory	1	9.1
Very unsatisfactory	0	0.0
Total	11	100.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다섯 가지 세부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가 32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31점), ‘친환경 산지유통시설’(28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28점), ‘친환경 교육·관광기반시설’(1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⁶⁾ 구체적으로 중요도 1순위

5)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매우 불만족이다(1점), 불만족이다(2점), 보통이다(3점), 만족이다(4점), 매우 만족이다(5점)의 순임.

6) 점수의 산정방식은 중요도 1순위에 5점, 2순위에 4점, 3순위에 3점을 부과하여 도출함.

로는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네 개 항목은 모두 동일한 18.2%로 나타났다. 중요도 2순위로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가 36.4%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27.3%,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이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3순위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18.2%, ‘친환경 교육·관광기반시설’ 9.1%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Importance on the particular project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Importance (N, %)			Score ¹⁾
	1st	2nd	3rd	
Produc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2(18.2)	3(27.3)	2(18.2)	28
Produc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2(18.2)	4(36.4)	2(18.2)	32
Resource recovery center of crop-animal farming	2(18.2)	3(27.3)	3(27.3)	31
Distribution facilitie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3(27.3)	1(9.1)	3(27.3)	28
Educational facilitie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2(18.2)	0(0.0)	1(9.1)	13
Total	11(100.0)	11(100.0)	11(100.0)	

Note : 1) Score means a summarized importance that is provided 1st to ‘5’, 2nd to ‘4’ and 3rd to ‘3’.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느 곳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6). 먼저 중앙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세부사업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39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산지유통시설’(35점),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30점),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19점), ‘친환경 교육·관광기반시설’(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산지유통시설’가 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27점), ‘경축순환자원화센터’(22점),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21점), ‘친환경 교육·관광기반시설’(1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등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단지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의 유통 등과 같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대상 지역 외 및 관내 인근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5점 만점에 평균 4.1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Table 7). 구체적으로는 ‘다소 파급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우 파급효과가 크다’(36.4%), ‘파급효과가 별로 없다’(9.1%)의 순이었다.

또한 이 사업이 국내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4.55점으로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구체적으로 ‘매우 기여한다’라는 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어느 정도 기여한다’라는 의견이 45.5%로 나타났다.

Table 6. Focused particular project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th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Central government			Score ¹⁾	Local government			Score ¹⁾
	Focused particular project (N, %)				1st	2nd	3rd	
	1st	2nd	3rd					
Produc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0 (0.0)	6 (54.5)	2 (18.2)	30	1 (9.1)	4 (36.4)	2 (25.0)	27
Produc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1 (9.1)	2 (18.2)	2 (18.2)	19	2 (18.2)	2 (18.2)	1 (12.5)	21
Resource recovery center of crop-animal farming	5 (45.5)	2 (18.2)	2 (18.2)	39	3 (27.3)	1 (9.1)	1 (12.5)	22
Distribution facilitie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4 (36.4)	0 (0.0)	5 (45.5)	35	3 (27.3)	2 (18.2)	4 (25.0)	35
Educational facilitie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1 (9.1)	1 (9.1)	0 (0.0)	9	2 (18.2)	2 (18.2)	0 (0.0)	18
Total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11 (100.0)	8 (100.0)	

Note : 1) Score means a summarized importance that is provided 1st to ‘5’, 2nd to ‘4’ and 3rd to ‘3’.

Table 7. Ripple effect and contribution of the project o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s spread

	Ripple effect (N, %)	Contribution (N, %)
Strongly agree	4(36.4)	6(54.5)
Agree	6(54.5)	5(45.5)
Normal	0(0.0)	0.0(0.0)
Disagree	1(9.1)	0.0(0.0)
Strongly disagree	0(0.0)	0.0(0.0)
Total	11(100.0)	11(100.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대성과에 대해 ‘경종 및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의 확대’가 39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및 면적 확대’(26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및 거래교섭력 강화’(25점), ‘선별, 품질향상노력 등과 같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인식 제고’(16점),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12점), ‘친환경농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확보’(7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어려움 해소(병해충 및 제초문제 등)’(4점), ‘복잡한 인증절차의 간소화’(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 제고, 지도자 양성 등에 대해서는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성과 1순위로는 ‘경종 및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의 확대’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및 거래교섭력 강화’(27.3%),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및 면적 확대’(9.1%), ‘선별, 품질향상노력 등과 같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인식 제고’(9.1%),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9.1%)의 순이었다.

Table 8. Performance expected of th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project

	Performance expected (N, %)			Score ¹⁾
	1st	2nd	3rd	
Find a market	3(27.3)	1(9.1)	2(18.2)	25
Improve a awareness of consumers	0(0.0)	0(0.0)	0(0.0)	0
Guarantee a rational price	0(0.0)	1(9.1)	1(9.1)	7
Improve a awareness of farmers	1(9.1)	2(18.2)	1(9.1)	16
Expand a production	1(9.1)	3(27.3)	3(27.3)	26

	Performance expected (N, %)			Score ¹⁾
	1st	2nd	3rd	
Spread a natural circulation agriculture	5(45.5)	2(18.2)	2(18.2)	39
Resolve a difficulty of production	0(0.0)	1(9.1)	0(0.0)	4
Simplify a certification process	0(0.0)	0(0.0)	1(9.1)	3
Support of government	1(9.1)	1(9.1)	1(9.1)	12
Train leaders	0(0.0)	0(0.0)	0(0.0)	0
Total	11(100.0)	11(100.0)	11(100.0)	

Note : 1) Score means a summarized importance that is provided 1st to '5', 2nd to '4' and 3rd to '3'.

3.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두는데 필요한 요인으로는 '사업추진단의 적극성'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후관리 강화'(18.2%), '구체적이고 정밀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9.1%), '신속한 인허가 절차'(9.1%), '기타'(9.1%)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Success factors of th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project

	N	%
Activeness of project team	6	54.5
Secure a project site	0	0.0
Simplify an approval process	1	9.1
Tighten a management	2	18.2
Detail plan	1	9.1
Others	1	9.1
Total	11	100.0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조성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가 53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인지도 제고'(23점),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정부의 소득지원'(23점), '친환경농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도입'(15점),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교육'(10점),

‘친환경농업 관련 경영컨설팅’(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가능요인 1순위로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가 81.8%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인지도 제고’(9.1%),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정부의 소득지원’(9.1%)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Sustainable factors of th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fter end of the project

	Sustainable factor (N, %)			Score ¹⁾
	1st	2nd	3rd	
Technical education	0(0.0)	1(9.1)	2(18.2)	10
Management consulting	0(0.0)	2(18.2)	0(0.0)	8
Develop brands	1(9.1)	3(27.3)	2(18.2)	23
Find a market	9(81.8)	2(18.2)	0(0.0)	53
Incentive/penalty	0(0.0)	0(0.0)	5(45.5)	15
Income support	1(9.1)	3(27.3)	2(18.2)	23
Increase a certificate authority	0(0.0)	0(0.0)	0(0.0)	0
Others	0(0.0)	0(0.0)	0(0.0)	0
Total	11(100.0)	11(100.0)	11(100.0)	

Note : 1) Score means a summarized importance that is provided 1st to ‘5’, 2nd to ‘4’ and 3rd to ‘3’.

친환경농업 생산을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친환경농업 및 기술보급 관련 정책’이 34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병해충 방제 종합관리 정책’(29점), ‘화학비료 저감 관련 정책’(25점), ‘살충제, 제초제 등 농약사용 저감 정책’(16점), ‘적정 작물재배 면적 및 가축사육두수 규제 정책’(9점), ‘가축분뇨 처리 정책’(8점), ‘적정시비 관련 정책’(6점), ‘기타’(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정책 1순위로는 ‘친환경농업 및 기술보급 관련 정책’과 ‘화학비료 저감 관련 정책’이 2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병해충 방제 종합관리 정책’(18.2%), ‘살충제, 제초제 등 농약사용 저감 정책’(9.1%), ‘가축분뇨 처리 정책’(9.1%), ‘기타’(9.1%)의 순이었다.

Table 11. Necessary policies for spread of th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Necessary policy (N, %)			Score ¹⁾
	1st	2nd	3rd	
Reduce a use of chemical fertilizer	3(27.3)	1(9.1)	2(18.2)	25
Reduce a use of agricultural chemicals	1(9.1)	2(18.2)	1(9.1)	16
Disposal of livestock excretions	1(9.1)	0(0.0)	1(9.1)	8
Disseminate a technical information	3(27.3)	4(36.4)	1(9.1)	34
Pest control technique	2(18.2)	4(36.4)	1(9.1)	29
Proper fertilization	0(0.0)	0(0.0)	2(18.2)	6
Regulation of livestock breeding	0(0.0)	0(0.0)	3(27.3)	9
Others	1(9.1)	0(0.0)	0(0.0)	5
Total	11(100.0)	11(100.0)	11(100.0)	

Note : 1) Score means a summarized importance that is provided 1st to '5', 2nd to '4' and 3rd to '3'.

IV. 요약 및 결론

2006년부터 시작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 신청지역이 급감하는 추세이며, 지역에 따라 민원과 갈등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선정된 14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중 11곳의 사업단 및 해당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성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및 효율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성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필요성, 적정규모, 사업선정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사업필요성은 응답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선정방식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적정면적에 대해서 현행 200 ha 이상 규모를 유지하되 품목별로 소규모권역 설적이 가능토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6년 사업초기 1,000 ha 이상의 규모에서 지속적인 사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현재의 200 ha 이상 규모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조성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는 사업만족도,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도, 기대성과, 세부사업의 중요도로 구분하였다. 사업만족도는 평균 3.55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사업대상 지역 외 및 관내 인근지역으로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평균 4.18점(5

점 만점)이며, 조성사업의 친환경농업 발전 및 확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평균 4.55점 (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업의 기대성과로는 ‘경종 및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의 확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및 면적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근 친환경농업 면적 및 출하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친환경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이 국내 친환경농업 확산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사업의 중요도에 있어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 산지유통시설’의 순이다. 세부사업 중 중앙정부에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다를 수 있다.

셋째, 조성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성공요인 및 지속가능요인,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필요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성공을 위한 필요요인으로는 ‘사업추진단의 적극성’, ‘사업 사후관리 강화’등으로 나타났다. 조성사업의 종료 후 친환경농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보’, ‘자체브랜드 개발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및 기술보급 관련 정책’, ‘병해충 방제 종합관리 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정부의 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수립이 필요하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지 내 생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반면, 본 연구결과는 조성사업의 사업단 및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분석과 발전방향을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FTA 및 TPP 등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방향성 제시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전략과 관련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14년 8월 현재 45개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중 완료된 11개 단지만을 분석한 한계와 친환경농업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중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에만 국한한 한계가 있다. 향후 전체 조성 사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사업담당자 및 시·군 담당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농업확산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1. Choi, B. O., H. Kim, and K. H. Lee. 2014. Analysis of Characteristic and Proportion Treated by Distribution Channel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Korean J. Organic Agric.* 22(1): 1-22.
2. Heo, S. W. 2013. An Analysis on Farmer's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Project for Developing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Korean J. Organic Agric.* 21(1): 49-59.
3. Heo, S. W. and H. Kim. 2013.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for Developing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Korean J. Organic Agric.* 21(3): 351-362.
4. Jeong, H. K., C. H. Kim, and J. K. Jang. 2010. Analysis of Organic Agricultural Farming Organizations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with Reference to Organic Farming Cluster. *Korean J. Organic Agric.* 18(3): 331-345.
5. Kim, D. W. and H. J. Park. 2014. 2014 Public Opinion Survey on Agriculture and Rural Are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6. MAFRA,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Guidebook, 2013.
7. Yang, S. B. and H. Kim. 2015. An Analysis of Performance and Farmer's Awareness on th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Korean J. Organic Agric.* 23(1): 19-30.